

●● 제1회 정책경연의 장(2021년 2분기) 결과
 ●● 1위~3위 정책제안서

No.	위원회	정책명	쪽	표
1	기후환경 에너지위원회	선거공보물 및 현수막 등 선거폐기물 최소화 및 온라 인제공의무에 관한 방안	2	61
2	교육위원회	고등교육의 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고등교 육재정 구조개편	3 ~ 4	60
3	청년위원회	랜덤 박스, 확률형 아이템 판매 규제	5	40
4	정책위원회 및 정책기획조정회의 주요 심의 코멘트		6 ~ 7	-

*참고 : 총 105명 투표

*투표기간 : 6월27일~7월4일

선거공보물 및 현수막 등 선거폐기물 최소화 및
온라인제공의무에 관한 방안

No. 1

1. 제안 위원회 :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

2. 제안 정책명 :

선거공보물 및 현수막 등 선거폐기물 최소화 및 온라인제공의무에 관한 방안

3. 정책내용

• 현황 및 문제점

매 선거 때마다 각 후보들의 공보물, 선거운동원들의 띠지를 비롯한 용품들, 현수막 그리고 2020년부터는 일회용 비닐장갑까지 선거 한 번에 심각한 쓰레기가 발생 되고 있음. 특히 2022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 등 굵직한 선거가 두 개나 있기에 나오는 폐기물의 양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정책적 질문

- 1) 스마트폰이나 pc를 소유/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 2) it활용도가 떨어지는 인원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 주요 정책내용

- 1) 선거후보들 전원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공보물만 발행 후 그 외 공보물은 전부 온라인으로만 제공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2) 현수막 명함발행 등은 정해진 수량만큼만 발행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며 최대한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 3) 백신접종인원은 특별히 일회용 비닐장갑을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

• 기대효과

- 공보물 등 폐기물의 획기적인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음
- 친환경소재사용을 높이고 재활용비율을 높일 수 있음
- 불필요한 폐기물(비닐장갑 등)을 줄일 수 있음.

4. 개선방안 :

- 고령자 및 it활용 미숙자들의 온라인 공보물 열람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됨.

- 부연 설명 :

그런 인원들을 위해 주민센터, 마을회관, 양로원, 노인정, 특수학교, 경찰서 등 필수시설에는 종이매체 공보물을 비치하여 필요 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고등교육의 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재정 구조개편

No. 2

1. 제안 위원회 : 교육위원회

2. 제안 정책 : 고등교육의 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재정 구조개편

3. 정책 내용

● 배경(현황 및 문제점)

- 고등교육의 양극화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지원 및 분배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¹⁾
- 교육부는 지역(산업) 및 대학의 특성화를 지향하고, 지역의 모든 대학에 통제권을 행사하되, 재정지원원은 미흡하여 대학과 지역의 연계 발전에 비효율 초래.
- 지역의 중·소 규모 사립대학은 재정 구조를 등록금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으며²⁾, 교육부의 획일적인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지표)로 인해 합리적인 구조개혁³⁾이 어려운 상태.

● 주요 내용(정책 대상 및 개선점)

- 고등교육재정⁴⁾의 규모를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제정 또는 「고등교육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여 재정지원 및 분배 구조를 개편하고 투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예·결산에 반영해야 함.
- 지역 맞춤형(교육) 정책을 위해 산학이 연계하려면 교육부보다,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지역 대학의 존폐에 따른 영향을 함께 받는 지자체가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국·공·사대)과 (가칭)지역대학재정지원사업을 운영하고, 교육부는 지자체에 그에 상응하는 적정 권한을 이양하고 지원하는 역할로 전환해야 함.
- 발전을 위한 의지와 역량이 있지만, 현재 여건이 되지 않는 대학의 경우에도 개혁에 대한 추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마중물 펀드” 제도를 도입하여 혁신의 계기를 제공하되, 한계대학⁵⁾의 퇴로를 열

1) OECD(2019) 평균 대비 투자 규모는 초등교육 130.2%, 중등교육 124.1%, 고등교육 67.4%. 사립대학은 '11년 대비 '18년 교육여건 개선 투자 규모가 9.5%(1,995억원) 감소.

2) RIS 사업을 제외하고 2020년 대학재정지원사업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서강대학교 약 86억원, 한동대학교 약 67억원, 한림대학교 약 98억원인 반면, 연세대학교 397억원, 고려대학교 381억원, 경북대학교 385억원, 부산대학교 441억원, 전남대학교 341억원 등 편중된 재정지원사업 지원을 받고 있음. 재정지원사업을 0원 받는 50여개 대학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금액을 받는 대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억2천6백만원.

3) 구조조정(Downsizing) : 대학 내 학과 통폐합 및 정원 조정, 대학 간 통폐합, 연합 및 제휴 등 양적 감축을 뜻함. 구조개혁(Restructuring) : 양적 감축과 질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대학의 특성화 발전을 유도하고(학과 특성화), 발전적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대학 간 역할 분담 및 지역사회와 상생). 대학 특성화 : 대학 자원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학문 분야, 기능유형, 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역과 학내 외 자원을 집중 배분하고 육성하여 대학 경쟁력 제고 및 대학 간 역할과 기능의 차별화(수직적 특성화).

4) 고등교육재정은 교육부 사업을 통한 국고지원으로 이루어져서 연 단위 예산 확보의 변동이 심해 재정지원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함.

5) 한계대학은 경영 상태에 따라 회생가능대학, 회생불가대학, 자발적 퇴로가 필요한 대학, 비자발적 퇴출

어주는 체계적 절차와 유인체계 입법 추진.

● 기대 효과

-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대학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지역과 대학 특성화에 기여할 것.⁶⁾
- 수도권대학과 지역거점국립대에 편중된 대학재정지원 예산으로 발전 의지와 역량을 가진 비수도권, 중·소 규모 대학에 지원하고,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지원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 연계형 특성화 대학이 많아지고, 이는 고등교육 양극화 및 격차 해소에 기여.
- 고등교육 재정 확대는 대학교육의 질 향상⁷⁾으로 이어지며, 대학재정지원 사업이 좀 더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⁸⁾으로 분배된다면, (지역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는 지역균형발전, 취·창업 및 투자, 청년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 한계대학 대응 방안을 통해 교육·연구·사회공헌 등에 기여하지 못하는 대학을 감축함으로써 건전한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과 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할 것.

4. 개선 방안(선택항목)

● 법률 (제)개정 (개정시, 법안명)

- 「고등교육법」 제7조 제3항을 개정하거나 별도 항을 신설하여 고등교육재정의 비율, 예산확보 방식, 예산 운영 계획에 관한 내용을 포함.

● 행정입법(대통령령 또는 시행규칙 등) (법안명)

- 「고등교육법」 제7조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일반 지자체가 고등교육에 대해서도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역 대학과 직접 지역 연계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등교육 재정지원 구조 개편.

● 자치법규 제개정(광역/기초 조례) (개정시, 조례명)

- 「고등교육법」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 조례(가칭 0000 고등교육 경비 보조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일반 지자체의 고등교육 경비 지원과 권한 및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대학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적 처방을 차별화하여 한계대학의 청산을 유도하는 퇴로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음.

6) 사업의 효과를 추적하고 평가하는 근거를 명시해야 할 것.

7) OECD(2019)에 따르면, 한국 대학생 1인당 정부 부담 공교육비는 \$3,985. OECD 평균은 \$10,267.

8) 한국의 경우 소득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교육재정의 사용량이 증가함. 즉,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교육에 투입되는 세금을 더 많이 가져가고 이를 통해 양질의 직장에 들어갈 확률도 높임. 고등교육비를 개별로 지출하지 않고 재정을 투입하여 일괄 처리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 적은' 교육 기회를 확대함.

랜덤 박스, 확률형 아이템 판매 규제

No. 3

1. 제안 위원회 : 청년위원회

2. 제안 정책명 : 랜덤 박스, 확률형 아이템 판매 금지 (온/오프라인)

3. 정책내용

• 현황 및 문제점

온/오프라인에서 랜덤 박스, 확률형 아이템 등으로 불리는 상품을 구매할 시, 구매자가 돈을 지불하고도 그 값어치에 상응하는 상품을 얻지 못하고, 대개의 경우 자신이 지불한 금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품을 얻게 됨.

특히 온라인 게임의 경우, 게임사에서 확률을 공개하지 않거나, 확률을 조작하는 등의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 최근에 드러났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행성 아이템은 필연적으로 상품의 가격보다 많은 돈을 지불하도록 유도함.

• 주요 정책적 질문

도박을 강력히 규제하는 국가에서, 랜덤 박스, 확률형 아이템 등 사행성 요소가 포함된 상품을 도박에 준하여 규제해야 하지 않은가?

• 주요 정책내용(정책대상 및 개선점)

- 1) 랜덤 박스, 확률형 아이템 전면 폐지. 돈을 지불하면 반드시 그 값에 상응하는 상품을 얻을 수 있도록.
- 2) 완전 폐지가 불가하다면, 도박을 규제하는 것과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하기.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수익의 일부분은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등, 사행성 상품을 판매할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 기대효과

- 소비자 입장에서 원하는 상품을 얻기 위해 해당 상품의 본래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상황 방지.
- 사업자의 무분별한 사행성 상품 판매 금지

정책위원회 및 정책기획조정회의 주요 심의 코멘트

1.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 : 선거공보물 및 현수막 등 선거폐기물 최소화 및 온라인제공 의무에 관한 방안

코멘트 :

- 선거를 앞두고 꼭 필요하며, 이슈화 시키기에도 좋고, 환경을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 온라인에 대한 취약층을 배려하는 방법을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제공시 실제 받는지 그리고 정보격차에 대한 소외자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전달이 확인될 수 있는지 장치 고민이 필요.
- 선거제도에 환경을 고려하는 접근 적절합니다.
-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법 등에 대한 대체제로서 합당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명함을 대체하거나 현수막을 대체할 대체에 대한 모색이 더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 정책과 운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선관위에서 관리 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2. 교육위원회 : 고등교육의 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재정 구조개편 코멘트 :

- 현재의 대학교 재정지원사업을 교부금으로 바꾸면 좋은 효과, 그리고 교부금으로 바꿀 경우, 혹시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의 교부금 신설이라면 내국세를 나누어 갖는 형식이라, 재원확보방안에 대하여 국가 큰 틀에서 조정이 필요. 이 부분에 대하여 보완이나 고민이 필요.
- 지방자치를 위한 기반 마련으로 긍정적이나 제도적 허점으로 부실화 초래가 있을 수 있으니 중앙부처가 컨트롤 타워역할을 겸하여야 한다는 의견.
- 지자체와 기업체의 연계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인구감소 대비 대학 구조조정과 고등교육재정 구조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나 대안의 구체성이나 정책 방향은 재논의가 필요함. 대학에 대한 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옮기는 것에 대해 반대가 있을 수 있음. 교육부가 대학평가를 통해 대학 운영을 통제하는 지금과 같은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나 이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것은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사무위임에 관한 조항에 부합하는지도 확인 필요
- 대학개혁과 관련해서는 산업사회의 변화, 인구구조 변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어서 마중물 펀드 같은 것으로 효과가 날 수 있을까에 의문점 있음. 대학을 고등교육기관으로 남기기보다는 연구중심의 지역센터, 커뮤니티 교육(평생교육)에 중점을 두는 개혁이 더 필요해 보임.

3. 청년위원회 : 랜덤 박스, 확률형 아이템 판매 규제

코멘트 :

- 최근 규제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 중 하나임. 다만 정부에서 규제안을 만들어 논의 중이고, 게임 업계에서 자율규제를 계획하고 있어 현재 제안된 내용을 능가하는

정책대안이 이미 논의되고 있음.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나 우리 당의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함. 관련 기사 아래 링크 참조. <https://news.v.daum.net/v/20210615142002538>

- 규제보다는 소비자보호정책을 강화하면 좋을 듯합니다.
- 사행성에 가까운 영업방식. 사실상 행운을 조장한 사기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제도 필요해 보임.
- 일괄적인 규제 보다는 과도한 중독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